

挺身隊 南北공동대응 「거부」

정부는 「核」등懸案 초점 흐려질 우려

정부는 北韓이 20일 제 6차고위회담 기본합의를 통해 挺身隊문제해결을 위한 南北공동대응책을 협의하고 공식제언한 것과 관련, 核사찰과 이산가족과 함반농 등 현안에 직면이 있을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挺身隊문제에 관한 南北공동대응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대표전송을 갖자는 北韓의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생각이다.

정부는 제6차 南北고위회담대표단이 지난 18일 平壤으로 출발하기 직전 北韓의 挺身隊문제제기에 대해 비, 이같은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료자는 「北韓이 挺身隊송환의 기본발견을 통해 挺身隊문제의 공평대응을 제기한것은 예상했던바」이라며 「그러나 北韓이 南北관계의 최대현안인 조기 核사찰에 대한 뚜렷한 실천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산가족고향방문 등 시범사업실시문제에도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문제의 초점이 흐려진다는게 정부안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료자는 이어 「北韓

挺身隊 北배상문제 日、修交교섭때 협의

加藤관방장관 밝혀

【東京=李洛淵】가토 고이치(加藤紘一)日本관방장관은 20일밤 기자회견에서 北韓이 挺身隊문제를 제안한 것과 관련 「정부는(일본)의 사정은 남북한 출신의 前종교와 안부 전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보상은 제(특한과)의 수교교섭에서 청구권문제로서 협의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日、挺身隊 개인별배상 안해

시日本이 대만 여선수를 前종교와 안부로 강제로 끌고 간데 대해 일본에 사과를

지낸9월 靑瓦臺에서 盧대통령과 회견한 이 백과 사전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프랭크 김씨는 이북집에서 盧대통령의 北方정책을 평가한후 △金日成정권의 성격 △경제전문제 등이 조속한 통일현의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무성 高位관리 밝혀

【東京AP獨聯】日本정부는 2차세계대전 당시 前종교와 안부로 강제징발됐던 北韓의 여성들에 대해 개인별배상금을 지불할수는 없을것이 라고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관리가 20일 말했다.

이날 일본 정부가 일본인 전쟁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서

【臺北獨聯】臺灣의 立法院 의원들은 2차대전당

臺灣의원들

아르메니아와 수교 韓國과 아르메니아는 21